

특별시의회 원구성 윤곽... 의장단·상임위원장 '경선'

민주당 당선인 총회서 자율경선 방식으로 의결 부의장 전남·광주 각 1명...상임위원장 '7대4' 배분 교섭단체 10명 이상 구성...원내대표 권한도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원구성의 큰 틀이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자율경선 방식으로 진행하고, 부의장은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16~17일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총회를 개최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원활한 원구성을 위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운영 원칙과 원

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총회는 송형근 당선인(고흥1·4선)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진행했다.

당선인들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더불어민주당 배분위원회 제안대로 자율경선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장 추대론 대신 당선인들의 투표를 통한 경쟁 선출 방식이 확정됐다.

부의장은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기로 했다.

또 11개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는 전남 7석, 광주 4석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전남과 광주의 균형 있는 참

여와 협치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원내 운영 체계도 정비했다. 당선인들은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해 원내대표와 의회운영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은 기존 전남도의회 방식을 준용하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먼저 선출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상임위원장을 확정하고 이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원내대표 권한도 강화된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 추천 권한 등을 부여

하기로 했으며 관련 조례 제·개정은 원내대표와 의장단이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원내대표는 차기 의원총회에서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과 함께 선출될 예정이다.

교섭단체 구성 기준도 마련됐다. 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는 의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강수훈 당선인(광주 서구1·재선)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원내대표와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절차를 총괄

하게 된다. 세부 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전국 최초의 광역 통합 지방의회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적 절차와 협치 정신을 바탕으로 특별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의회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윤리규범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함께 진행됐으며, 당선인들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진보당 광주시당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를 "소수정당 배제...민주당 독주 신호탄" 지적

진보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의원 10명 이상으로 의결한 민주당을 향해 기준 완화를 촉구 하고 나섰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당선자 총회를 열고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정한 것은 의회의 민주적 운영,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준비를 위한 안전협약체를 민주당만으로 구성한 것에서 우려했듯 민주당 독주의 신호탄이자 집단 따돌림"이라며 "민주의 성지 전남·광주를 민주당만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독선과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당선자 총회는 민주당 내부 결정 과정일 뿐 공식 결정은 7월 1일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며 "민주당이 교섭단체 기준을 낮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적 원 구성과 협치를 위해 교섭단체 기준을 국회 수준인 6.67% 또는 비례대표 진입 기준인 5%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전남 전남 보성에서 열린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의원 10명 이상으로 정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자율경선 원칙에 따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전...이전부지 선정 본격화

국방부 장관 주재 선정위원회 선정기준·절차안 등 2건 의결 이달 부지 지정·10월 주민투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본격화됐다.

광주시는 17일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이후, 다음 단계인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이번 첫 회의의 개최는 부지 선정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6차 협의체 참여 기관을 비롯해 관련 중앙부처, 민간위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전후보지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선정된다. 제도적 타당성은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이다. 공공 적성성 검토, 관계 법령상 인·허가 가능성 등 이전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분야별로 검토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성은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이다. 예비이전후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이전후보지 선정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회의를 주재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회의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선 참석자들과 하고 있다.왼쪽부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안규백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발점이며, 군공항 이전을 넘어 군기안보, 지역개발,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국책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무안군민들의 우려가 기대와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 12월17일 6차 협의체 이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선 9기 착공, 민선 10기 준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부지 선정이 선결돼야 한다"며 "아직 주민투표라는 큰 산이 남아 있어, 군공항 이전 사업이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는 안되며, 무안군수님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군민들은 국가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강하게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산단에 첨단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주도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민들은 아직 1조원 지원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국가사업의 가시적 진척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크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1조원 지원책의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사업

의 가시화 및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이전사업 일정에 맞춰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이후 일정은 이달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이전후보지 선정에 이어 오는 9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 공고를 한다. 10월 주민투표 유치 신청, 11월 이전부지 선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일곱계절 정원'



'운평769'

도, 생활 속 예쁜정원 10개소 선정

대상 '일곱계절 정원'...주민 참여형 정원문화 확산 기대

전남도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를 유도하고 주민 참여형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예쁜정원 콘테스트'를 열어 '일곱계절 정원'을 포함해 총 10개의 우수 정원을 선정했다.

대회는 생활 주변에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심고 가꾼 정원을 발굴해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개인 정원과 생활권 정원 2개 부분으로 진행됐다. 17개 시군, 40개소가 응모했으며,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 정원이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일곱계절 정원의 서순미 정원주는 "4계절에 초봄, 초여름, 늦가을을 더해 일곱 계절의 풍경을 담았다"며 "특정 계절에만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초봄부터 겨울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원을 연출했다. 정성을 다해 가꾼 정원이 큰 사랑을 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생활권정원 부문에선 최우수상 순천 '운평769(김미정 정원주)', 우수상 담양 '리소프(진호재 정원주)'가 선정됐다.

개인 정원 부문에선 담양 '서린원(김규영 정원주)'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여수 '나이의 정원(이춘열 정원주)', 곡성 '벨 지아르디노(문숙희 정원주)', 완도 '시인의 정원(김시욱 정원주)'이, 특별상은 완도 '킴

스가든(김윤화 정원주)', 광양 '사계현(이희숙 정원주)', 보성 '금하현(윤숙정 정원주)'에 돌아갔다.

선정된 예쁜정원은 올해부터 국립정원문화원과 협업 중인 정원관광 프로그램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정원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6년간 예쁜정원으로 선정된 우수 정원은 58개소다. 순천 '화가의 정원산책', 해남 '문가든·비원', 보성 '성림정원' 등 14개소 정원이 전남도 민간정원으로 등록돼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도는 매년 정원 콘텐츠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보원 사업과 민간정원 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전국 유일 국립정원문화원이 담양에 개원해 전국 최초 정원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과 광주의 정원자원을 연계해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정원과 산림 생태축 등을 연계한 15분 거리 녹색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 정책대동회서 통합특별시 정책 제안 경청

20일 도청서 '바란' 5차·시·도민 200여 명과 현장 토론 정부지원금 20조 원 활용 방안·미래 전략 정책과제 논의

전남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도청 1층 소공연장에서 전남 정책대동회 '바란' 5차 행사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도민의 정책 제안을 듣는다.

행사는 정부 지원금 20조 원 활용 방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참여형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처가 주재하는 이날 행사에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위원과 시·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

이다. 민간 중심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이 포럼은 현재 위원 수 1만 명을 넘어섰다.

행사에선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추진 경과 △정부 지원금 20조원 활용 주요 제안 △기업 유치 디지털 홍보자료 등을 공유하고 효율적 재정 활용 방향과 통합특별시의 미래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에선 포럼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광주 북구의회, 310회 임시회

참석자들은 지역발전 전략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정책, 생활SOC 확충, 균형발전, 시민참여형 재정 운영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전남도는 제시된 의견을 통합특별시 정책과 재정 운영 방향에 검토·반영하고, 시·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도전"이라며 "20조 원 규모 정부 지원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시·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북구의회, 310회 임시회

광주 북구의회는 17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까지 7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 및 조직·직위 명칭 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추경은 기정액 대비 896억원이 증액된 1조 15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642억 7900만원,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5억 99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